

시론

엘리엇 공격, 공정거래법부터 개정해야



전 삼 현

승설대 교수·법학

지난 21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 합병 당시 한국 정부가 부당 개입해 7100억 원대의 피해를 봤다며 투자자 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다고 한다. 엘리엇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갈등이기도 나선 듯하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처방법이다. 28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필요하면 상법·본사장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즉 상법이나 본사장법을 개정하면 엘리엇 같은 헤지펀드들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다를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집중투표제의무화, 감사 위원회선출, 다중표소송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엘리엇의 공격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상법이나 본사장법에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 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대기업들은 정관변경이라는 백색악수를 전혀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상법이나 본사장법 개정만으로는 헤지펀드의 공격을 막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이보다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최근 현대차그룹의 사례를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기한에 입박해 현대차그룹이 현대모비스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엘리엇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합병이라는 다른 제안을 하면서 2개월 만에 현대차와 공정위의 안을 무산시켜버렸다. 2개 대기업이 합병해 지주회사가 돼야만 글로벌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완성차 제조업체(OEM)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즉 금산(金產) 융합을 통해서라도

“

**헤지펀드 공세 ‘경영권 방패’도 부족
금산분리·순환출자 규제 완화하고
경영정보 공시제도도 보완해야**

”

현대차그룹이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것이 엘리엇의 반대 이유인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원장은 일반주주회사가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등과 같은 금융사를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협력방법상 금산분리와 반기별로 불가하다는 입장은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엘리엇이 공정위의 판단에 순순히 따를 것 같지는 않다. 삼성물산의 사례처럼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합병을 공정위가 반대해 순회를 입었다는 이유로 ISD를 제기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는 국내 대기업들의 자배구조 개편

의 주체가 더 이상 우리 기업이나 정부가 아닌, 외국계 헤지펀드가 돼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업의 자배구조 개선에 대해 개입 정도를 조절하면 된다는 주장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강도의 무를 위한 위법 여지를 남겨두기 때문에 해법이 될 수는 없다.

결국 엘리엇과 같은 헤지펀드들의 공격으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의 개정보다는 오히려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찾는 것이 선순위인 듯하다. 구체적으로는 지주회사에 대해 경직화된 현행 규제체계를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로 할 수 있다. 즉 지주회사나 손자회사, 증손회사에 대한 경직화된 자본 소유 규제와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순환출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역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현대차그룹의 경우, 공정위의 순환출자 해소 압박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배구조 개편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순환출자 해소가 우리 경제의 만병통치약이라는 인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내 대기업들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순환출자가 유일한 경영권 방어수단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대기업들의 중요한 경영정보와 자본소유 구조를 모두 공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의 공시제도 역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 공시가 헤지펀드들에 공격루트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

천자 칼럼

‘슬로(slow) 건축’

미국 뉴욕 맨해튼의 컬럼비아대 옆에 있는 세인트 존 더 디비인 대성당은 127년 째 공사 중이다. 미국 성공회가 1892년 첫 삽을 뜯 뒤로 2050년 완공 기일까지 33년이 넘었다. 그래서 ‘미완의 세인트 존으로 불린다. 19세기 말부터 21세기까지 158년에 걸친 공사가 마무리되면 실내 면적 1만 200㎡의 세계 최대 성당이 된다.

이보다 먼저 작곡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성가족성당)는 137년째 건축 중이다. 세계적인 건축가 가우디가 30세 때인 1882년부터 74세로 티계한 1926년까지 40년을 바쳤고, 그의 사후 100주년인 2026년에야 완공될 예정이다. 베텁목 없는 곡면 설계의 ‘느린 방식’으로 위대한 성당을 짓겠다는 그의 ‘슬로(slow) 건축’ 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가우디는 성당의 중앙 첨탑 높이를 170m로 설계했다. 완공되면 독일 울름 대성당(161m)을 넘는 세계 최고(最高) 기록이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다. 바르셀로나 도심에서 가장 높은 본주의 언덕을 넘어서는 것은 신을 넘



보는 것과 같다. 가우디의 겸손한 건축 이념이 반영돼 있다.

이탈리아 시에나의 시에나 대성당은 800년이나 미완인 채로 남아 있다. 경쟁 도시 피렌체보다 더 큰 성당을 짓기 위해 1229년 착공했다가 페스트 침략과 재정 악화로 중단돼 지금은 거대한 벽체만 남아 있다. 종교 건축 맡고도 슬로 건축의 사례는 많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완성하는데 50년이 걸렸다.

한때는 짧은 기간에 높은 건물을 짓는 속도 경쟁이 벌어졌다. 1973년 세계무역 센터가 생기기 전까지 40여 년간 ‘마천루의 아버지’로 불린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은 102층 공사를 11개월 만에 끝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페스트트랙(fast

track) 공법 덕분이었다. 이는 2002년 상암 월드컵경기장 공사에도 적용됐다.

최근 건축계가 다시 ‘슬로’에 눈 돌리고 있다. 서울 흥대 앞 서교호텔이 부티크 호텔인 라이즈(RYSE)호텔로 거듭나는데에는 7년이 걸렸다. 지난달 완공한 이 호텔은 재건축에 가까운 리모델링 과정에도 섬형 힘을 기울였지만, 홍의대 주변의 ‘젊은 문화’와 인근 상권까지 고려하느라 기간이 오래 걸렸다고 한다.

2011년부터 이 호텔 리모델링을 이끈 한국계 미국인 건축가 스티븐 송 SCAAA 대표의 밀처럼 과거에는 빨리, 높이, 크게 짓는 것이 최선이었지만 지금은 ‘전천히 오래 스며드는 건축 문화’가 더 중요해졌다. 1947년 태동한 한국 근대 건설산업 역사도 70년이 넘었다.

세계 곳곳의 ‘느린 건축’ 현장을 보면서 가우디의 명언을 다시 떠올려 본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천천히 자라날 것이다. 오랫동안 살아남을 운명을 지닌 모든 것은 그레 왔다.’

고두현 논설위원 kdh@hankyung.com



• 새로운 여왕이 될 절호의 기회! •

제8회 롯데 캔타타 여자오픈

SBS골프 단독 생중계

롯데스카이힐 제주

1R : 6월 1일(금) 오전 12시 ~ 오후 5시

2R : 6월 2일(토) 오전 12시 ~ 오후 5시

FR : 6월 3일(일) 오전 11시 ~ 오후 4시

디펜딩 챔피언_ 김지현2



신흥 강자 등극_ 김아림



2018 상금순위 1위_ 장하나



시즌 2승 도전_ 인주연



사설

“감당 가능하다”는 근로시간 단축, 기업엔 사활 걸린 문제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간판 기업들은 인력을 늘리기보다는 근무시간을 단축적으로 운용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삼성전자가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제 도입 계획을 밝힌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무엇보다도 현장 훈련과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1~3년 걸리던 제품개발 주기를 부득이 종전보다 3~6개월 늘려 잡아야 할 형편이라고 한다. 후대폰과 TV처럼 제품주기가 짧고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자칫 속도 경쟁에서 뒤쳐질 수도 있다. 건설, 플랜트 같이 주 52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업종의 기업들은 맨날 상태다. 어디까지나 근로시간으로 불지 모호한 경우도 부지기수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14만~18만 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과로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던 정부의 기대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모습이다. 이 같은 간극은 한경이 마켓비전컨설팅그룹에 의뢰해 조사한 ‘주 52시간 근로제 대비 상황’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300곳 중 “신규 고용에 나서겠다”는 곳은 10.3%에 그쳤다. 해고가 어려워지면서 어떻게든 신규 채용은 피하겠다는 반응이었다. ‘작원의 실질임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50.7%)에 달했다.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예고하는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시장 생태계와 기

업 현실에 눈을 감고 있다. 문제인 대통령은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낙관론을 했다. 300인 이상 기업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이라 얘기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은 모든 기업에 적잖은 부담이다. 큰 기업이 흔들리면 경제 전체에는 더 큰 충격이 온다.

시장과 현장을 무시한 정부의 ‘정책 독주’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지난 1년간의 소득주도 성장 실태가 잘 보여 준다.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계 소득이 역대 최대로 감소해 분배지표가 최악을 기록했다. 하위 20% 소득 중 이전 소득이 근로소득을 처음으로 얻지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대통령 주재 경제점검 회의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그대로 밀어붙이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소득분배 악화는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정부가 참모 중심으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정책실패에 대해 핑곗거리만 찾은 회의가 되고 말았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말란 보장이 없다. 문 대통령이 “필요한 경우 유연하게 수정 보완 하리”고 했지만, 얼마나 개선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최근 발표된 10대 경제지표 중 9개가 악화됐다. 연일 하락하는 증권 시장 상황도 예사롭지 않다. 기업들의 신용소리와 시장 경고음이 점점 커지는데 정부만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수용소 집단’ 북한의 ‘적반하장’ 对南 인도주의 공세

북한이 지난 주말 미·북 정상회담 취소 고비를 넘기자 노골적인 ‘태세 전환’으로 돌변했다. 그제 관영매체를 통해 집단 탈북한 북한식당 여성업원 13명의 송환을 재차 요구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북·남 사이에 민족적 화해와 평화의 기류가 흐르고 있는 지금 우리 인민들은 기대를 안고 사랑하는 딸자식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이들의 송환) 남조선 당국의 성의와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라고 압박했다.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류경’도 “송환 문제를 바로 처리하지 않고선 북·남 사이의 그 어떤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도 기대할 수 없다”고 늘어놨다.

당장 내일(1일) 남북한 고위급회담에 앞서 북한이 ‘여종업원 송환’ 기드를 빼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입힌다. 문재인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남북철도 연결 등 기적 성과에 대한 기대가 큰 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북한이다. 더

시진핑의 거듭된 ‘기술 자립’ 선언, 한국 중간재 산업 위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들어 주요 행사 때마다 첨단 산업 분야의 ‘기술 자립’을 외치는 게 예사롭지 않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국과학원·중국공정원 원사(院士: 과학계 최고 권위자) 대회에서 핵심 기술 국산화를 역설했다. 시 주석이 지난달 “정보화를 전자 일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인터넷 관련 회의) “핵심 첨단 기술 육성을 가속화해야 한다”(공산당 정치국 회의)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미국이 중국 첨단산업 육성策인 ‘중국 제조 2025’를 겨냥해 통상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중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정점으로 올라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한국을 앞서기 시작했고, 5년이 지나면 한국이 중국에 비교우위를 기울여야 하나도 없다는 우울한 경고까지 나온다. 대중 수출전략의 재점검과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시 주석은 기술자립을 넘어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융합을 통해 중국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정점으로 올라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한국을 앞서기 시작했고, 5년이 지나면 한국이 중국에 비교우위를 기울여야 하나도 없다는 우울한 경고까지 나온다. 대중 수출전략의 재점검과 함께 새로운

주목할 것은 중국의 기술자립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다. 지난해 중국 시장은 한국 전체 수출의 24.7%를 차지했는데 대중 수출의 78.9%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활화학 제품 등 중간재 품목이다. 한국 경제의 베풀목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의 경우 증권을 포함한 중국 비중이 68%에 달한다. 중국의 기술자립 선언은 곧 한국 중간재 산업의 위기 신호나 다른 없다.

시 주석은 기술자립을 넘어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융합을 통해 중국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정점으로 올라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한국을 앞서기 시작했고, 5년이 지나면 한국이 중국에 비교우위를 기울여야 하나도 없다는 우울한 경고까지 나온다. 대중 수출전략의 재점검과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